

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 및 運營條例(案)

議案 審號	457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4. 8.

提 出 者：大田直轄市長

1. 提 案 理 由

- '89. 1. 1 直轄市 昇格으로 忠南道와 大田市가 分離됨에 따라
'89. 4. 4 大統領 公約事業中 勞動福祉會館 建立支援 事業으로
- 그동안 우리시 管内 2,479개의 事業體에 從事하는 12만여 勤
勞者들의 便益施設은 물론 福祉增進 全般에 필요한 福祉施
設이 없고, 現在 賃貸使用中인 勞動團體 事務室을 確保하여
勤勞者의 구심役割을 圖謀하는데 勞動綜合福祉館 建立 運營
이 切實하며
- '94. 7. 1 既 竣工된 勞動福祉館의 開館・運營에 必要한 勞動
綜合福祉館 設置 및 運營條例를 制定코자 함

2. 主 要 骨 子

- 가. 勤勞者의 經濟・社會・文化的인 生活의 向上과 福祉增進을
위한 勞動綜合福祉館 設置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
(案 第 1條)

나. 勞動綜合福祉館의 業務規定(案 第 3條)

- 勤勞者의 實費負擔으로 利用할 수 있는 經濟·社會·文化등 勤勞者의 生活便益 增進
- 勤勞者 就業促進에 寄與하는 無料職業相談 및 就業斡旋
- 勞動組合 또는 勞·使 共同으로 實施하는 各種教育, 會議등 集會施設 實費供與

다. 勞動綜合福祉館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보하며, 所屬 職員의 職級과 定員은 市長이 따로 정함(案 第 4條, 第 5條)

라. 使用料의 徵收는 8鍾으로 區分하여 5,000원부터 40,000원 까지 徵收할 수 있도록 하고 專門業種(이·미용실, 식당)등은 市中料金の 80%以下를 徵收하도록 規定함(案 第 7條)

마. 福祉館의 利用은 大田直轄市內에 居住하는 勤勞者, 低所得層 市民과 一般市民 및 其他 市長이 認定하는 者로 規定함(案 第 10條)

3. 參 考 事 項

- 『勞動福祉會館』 및 『勤勞者綜合福祉館』 運營指針('90. 5. 30)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,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 2 조(위치) 복지관은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1304번지에 둔다

제 3 조(업무)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
1.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, 사회, 교양, 문화 등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
2. 근로자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무료취업알선(무료직업소개)
3. 대전직할시내의 노동조합 또는 노·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, 회의 등 집회 시설 실비공여
4. 기타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등

제 4 조(관장) ①복지관에 노동종합복지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

② 관장은 대전직할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, 감독한다

제 5 조(공무원)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

제 6 조(사용허가)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

4 (第34回 臨時會 - 文教社會 第1次 別添)

제 7 조(사용료)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
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

제 8 조(사용료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
1.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때
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때
3.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때

제 9 조(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등)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
1.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
2.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
3.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4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
5.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
6. 기타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

제 10 조(이용자의 범위)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
1. 대전직할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
2.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전직할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
3.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제 11 조(강사)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
② 제 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

제 12 조(양도 및 전대금지)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

제 13 조(운영) ① 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이라 한다)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,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

제 14 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

제 15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[별 표]

노동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

1. 기본시설 사용료

구 분	이 용 기 준	요 금	비 고
대 강 당 (예 식 장)	○ 1회 2시간이내	근로자 및 저소득층시민 20,000원 일반시민 40,000원	1시간 초과시 마다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은 10,000원, 일반시민은 20,000을 추가한다
소회의실	○ 1회 2시간이내	근로자단체 10,000원 일반단체 20,000원	1시간 초과시 마다 근로자 단체는 5,000원, 일반단체는 10,000원을 추가한다
이 용 실	○ 조 발 ○ 면 도	시중요금의 80%이하	기타 사용료는 시중요금으로 함
미 용 실	○ 파 마 ○ 컷 트 ○ 신부화장	시중요금의 80%이하	
식 당		시중요금의 80%이하	
구 판 장 (생 필 품)	○ 공무원 연금매점 판매가격에 준함		품목별 개당 공장도가격에 1 - 1.5% 이윤을 포함한 가격
예 법 실 (폐 백 실)	○ 1회	근로자 및 저소득시민 : 10,000원 일반시민 : 20,000원	오전, 오후 각 1회로 한다

2. 부속시설 사용료

품 명	기 준	요 금	비 고
피 아 노	1회	5,000원	

關 聯 指 針

『노동복지회관』 및 『근로자종합복지관』운영지침 요약

【회관 및 복지관의 명칭】

1. 행정상 명칭 사용

행정구역,공업단지명,기타지역명등을 붙여 “○○노동복지회관” 또는 “○○근로자종합복지관”으로 사용한다.

예) 대전근로자종합복지관

2. 실제상 명칭사용

실질적으로 시민 또는 근로자에게 알리는 명칭(간판사용)은 애칭을 사용할 수 있다

예) 샘터광장 또는 분수의 집

【관리, 운영의 기본원칙】

1. 회관 및 복지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기능에 의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, 사회적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

2. 회관 및 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(가)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, 문화, 기능교육, 탁아등 근로자 생활편익증진

(나)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의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직업 소개

(다)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, 체육, 오락

(라)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, 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 공여

【취득, 관리등】

1. 회관 및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
2. 회관 및 복지관과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
 - (가) 지방자치단체의 직영
 - (나)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
게 위탁
 - (다)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, 근로복지공사 또는 비영리법
인에 대한 대부,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(복지관의 경우 노동조합 제외)
3. 회관 및 복지관은 반드시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에 참여되어야 한다
4. 회관 및 복지관의 용도의 변경·폐지 기타 그 본래의 목적과 용도상 중요한 관
리,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5. '92년부터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통합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
립한다.

【시 설 기 준】

위치, 기능 및 세부시설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실정 및 회관규모에 맞게 설치한다

(도 시 지 역)

- 위 치 : 공단인근의 근로자 밀집지역 또는 도심지역
- 기 능 : 도시지역내에서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육구충족 및 기능교육·생활지원시설 제공
- 세부시설
 - 교양시설
 - 상담실 : 청소년 및 부녀근로자 상담실, 노동상담실, 법률상담, 퇴직근로자 상
담 취업알선
 - 취 미 : 꽃꽂이, 분재, 등공예, 서예, 예법실, 에어로빅

- 교육시설

- 기능교육 : 한복, 양재, 홈패션, 요리, 지점토, 미싱자수, 컴퓨터
- 교 육 장 : 대강당, 강의실, 소회의실, 세미나실, 다목적홀실

- 생활편익 시설

- 탁아시설 : 영아반, 유아반, 유치원반
- 생활지원시설 : 약국, 은행, 의무실
- 휴식시설 : 음악감상실, 레스토랑, 생맥주집, 목욕실, 다방, 영화관, 바둑,
장기실

- 문화시설

- 체육시설(실내) : 탁구장, 당구장, 체력단련실(남,여), 볼링장, 수영장
- 오 락 시 설 : 비디오케, 가라오케, 디스코장
- 근로청소년 문화 · 오락시설

- 지원시설

- 주차장, 관리사무실

【법 령 의 근 거】

-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,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- 각 지방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 기준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